

사회적 응집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질: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분석을 사례로

고형면

국문요약

이 논문은 유럽에서 대두된 사회의 질 담론이 궁극적으로는 현대사회의 공동체(주의)성에 토대를 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해 있다. 현대의 공동체주의적 사회성은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암묵적인 사회역량으로서 사회적 응집을 필요로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반대해 2008년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적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응집의 전형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에 축적된 응집의 역량은, 촛불집회를 통해,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라는 한국 사회성원들의 의지 및 실천력과 결합했다. 또한 촛불집회는 물질적·수량적 가치평가가 아닌, 내용적·과정적 측면에서의 치열한 검토가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주요어

사회의 질, 사회성, 공동체주의, 응집, 촛불집회, 논쟁적·급진적 다원(민주)주의

고형면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411-J01602). 최초의 원고는 2008년 10월 24~27일까지 중국 남경대학교에서 개최된 <Social Quality International Conference>와, 11월 <한국 비판사회학회>에서 발표됐다. 이 글은 그 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된 논문이다.

1. 머리말

「유럽사회의 질에 대한 암스테르담 선언(The Amsterdam Declaration On The Social Quality of Europe)」은 유럽 거주민(residents)들이 지구화로 촉발된 경제적 경쟁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안녕(well-being)과 잠재력 그리고 공동체적 복리를 증진시켜야 유럽사회의 질이 발전·증진될 수 있음을 표방한다. 국가별 차이와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유럽에서 '사회의 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등장한 배경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Berting & Villain-Gandossi, 2001).

우선, 계급갈등이나 조직화된 노동자로 대변되는 산업사회의 기반이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이에 편승해 개인주의적 성취 중심의 사회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지구적인 경제·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나 사회제도에 기댄 것이라 그런 분위기는 쉽사리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둘째로, 집단성과 개인성의 양극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들이 미래 지향적인 사회발전 모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된다. 셋째, 다문화사회 모델에 담긴 집단주의적 사고는 의외로 특수집단의 독자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방편으로 오용되거나, 공동의 이해추구란 미명하에 개인의 권리가 유린되게끔 만든다. 넷째, 현대의 도시영역은 더욱 더 상호의존적인 생활방식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네트워크에 포섭된다. 반면 도시민들의 포용력은 약화됐고, 사회적 혜택이 적거나 빈곤한 사람들은 자의든 타의든 도시생활에서 배제된다.

사회의 질 담론은 이와 같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사회성원들이 일상생활의 '사회성(the social)'을 고도화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즉 사회생활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안전·자원/사회적 응집성·포용성/개인의 권한·자율성을 한 차원 승화시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Beck et al, 2001). 사회의 질에 대한 문제의식과 논의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 주체들이 맺는

관계가 종합적 조화를 이루는(ensemble) 방식으로서의 사회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자원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가능성을 해소시키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며, 개인적·집합적 자율성 모두가 보장되며, 책임감 있는 사회참여가 필요하다(Council of Europe, 2005). 이는 개인들간의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사이에 형성된 응집성에 직결되며, 전체 사회의 결속력과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에서 사회의 질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것과 유사한 변화가 한국사회에서도 외환위기를 전후로 생겨났다. 1990년대로 접어들 때까지 무력과 강압적 통치로 점철된 폭력적인 권위주의 정권기 동안,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은 강고한 유대와 비밀결사체형 결속력을 바탕으로 발휘됐다. 이를 통해 정당성을 갖춘 권력과 사회 전반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다.

이후 급격히 불어 닥친 국가적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발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리로서 신자유주의가 득세했다. 공교롭게도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양극화를 초래해 한국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개인적 가치·신념·정체성의 다원화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목표 달성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됐지만,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만연이 사회적 병폐로 자주 거론됐다.

지금도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적절한 조율장치도 없는 가운데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 시기와 같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원화/총체화된 노력을 기하는 단일 차원적 실천방식으로는 금세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 사회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사회발전의 색다른 차원을 도모하려는 유럽 일각의 실천적 노력은, 다원적 가치의 중재를 통한 한국사회의 전향적 발전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우선 사회성, 사회적 응집, 사회의 질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별히 사회적 응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유럽사회의 질 지표¹⁾와 주요 조사 혹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의 촛불집회를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적 응집이 현재 어떠한 수위에 도달했는지를 밝힐 것이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그간 잠재돼 있던 한국사회의 응집력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가장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직면해 있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성(the social)과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적 수준도 점검할 것이다.

2. 현대의 사회성과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

I. 현대의 사회성에 대한 이해

현대사회 안에서 인간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종합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를 통해 생성되는 물질적·경제적 자원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다루기 위한 단순한 수사로서든 본질적 분석대상으로서든,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성격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제이다. 현재로서는 자본주의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중 어떤 것이 보다 잘 작동하고 효과적인 지를 밝히는데 관심이 집중돼 있다 (Coates, 2005).

현대의 사회성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실마리는 경제적 토대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로부터 얻어진다.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노동-자본’의 관계와 ‘시장’논리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특성이 현대의 사회성을 중요하게 결정짓는다.²⁾ 물질적·경제적 자

1) Beck et al.(2001)이 제시한 사회의 질에 대한 분석전략은 사회경제적 안전(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적 응집(cohesion), 사회적 포용(inclusion),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4대 영역을 토대로 구성된다. 이 중 사회적 응집은 크게 신뢰(일반적 신뢰, 특수 신뢰), 통합적 가치와 규범(이타주의, 관용, 사회계약), 사회적 네트워크, 정체성(국가/대륙간, 지역간, 개인간)의 4개 핵심 영역으로 재분할되며, 총 20개의 지표들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확보 및 분석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이하에서 살펴 볼 한국사회의 응집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회의 질에 대한 연구 및 분석전략 그리고 4대 핵심 영역 및 각각에 해당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http://www.socialquality.org/site/index.html>)를 참고할 것.

원을 둘러싼 인간적 상호작용이나 관계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대원칙 하에서 전개된다. 시장논리를 앞세운 경쟁력과 효율성에 대한 준칙들은 한 사회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현실적 조건과 결합되면서, 모든 사회성원들을 자본주의적 사회원리 하에 엮어 둔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입각한 물질적·경제적 여건과 기반만으로 현대의 사회가 지탱되기란 충분치 않다. 경제 외에 기타의 사회 영역에서도 사회성원들 사이의 불평등·불균등한 관계나 기회구조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문제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사회 영역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소 혹은 시정하기 위한 원리나 노력들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도들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실체를 떨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나 윤리 같은 암묵적인 것일 수도 있다. 순전히 자본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닌, 사회성원들 사이에 생겨난 공민적(civic) 역량은 현대의 사회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성원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 입장은 공민주의/공화주의/참여민주주의 등을 통해 형태를 달리하며 인류사에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삶을 최선에 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곧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상태를 최고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라는 사회과학적 사유와 사조도 강화됐다. 따라서 공동의 노력을 통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은 행위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고나 관념, 지식의 생성과도 맞물린 매우 폭넓은 인간적 실천 활동이다.

공동체의 중요성은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통용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됐으며, 사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위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등장했다. 일원화된 입장으로 정리

2) 현대 자본주의의 유형화와 관련해 시장과 조울(Hall & Soskice, 2001), 혁신이나 생산을 위한 사회적 체계(Amable, 2000), 생산·노동·금융·기업·사회보호 제도들(Amable, 2003)에 기초한 논의들이 대표적이는데, 시장 및 노동-자본 관계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공통의 논리적 맥락을 형성한다. 접근이나 이해방식은 달라도 노동-자본의 관계, 시장-국가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사회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차적인 대상임이 분명하다.

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공동체주의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에 병행되는 개인주의적 탐욕성에 대한 철저한 비판의식을 앞세웠다.³⁾ 아울러 시민교육 강화, 지역집단 자율성 확대, 협력적 공동체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와 이를 통한 사회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확산, 궁극적으로는 공공선에 의거한 사회개선에 치중했다(Tam, 1999).

사회의 공동체적 본성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전체 사회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일차적으로, 사회성원들이 공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절차나 과정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Nisbet, 1969). 공공의 목표 실현을 위한 참여를 통해 각 사회성원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관계적, 공동체적 맥락 하에 놓인 자신을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경제원리로서 자본주의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와 사회를 관통하고 있듯이, 공동체(주의)적 가치와 원리도 국가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목격된다(주종환, 2006). 정리하자면, 현대의 사회성은 자본주의적 속성과 공동체(주의)적 속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규정된다.

자본주의와 공동체주의 각각에 의해 현대의 사회성이 얼마나 드러나는지는 각 국가나 사회의 역사·사회적 특수성과 경험에 달려 있다. 또한 자본주의성과 공동체(주의)성은 상호간에 침투와 변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전자가 없다면 공동체주의는 공허한 슬로건에 불과해지며, 후자가 없다면 자본주의는 자기이익(self-interest) 추구로부터 생겨나는 잔인하고도 포악한 속성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현대사회 내에서 자본주의나 공동체(주의) 모두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젯거리를 빚어내고, 각각은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매우 상이한 방편을 취하는데, 이것이 대립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과적으로 현대의 사회성은 자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긴장과 갈등, 타협과 절충의 결과로 나타나며, 사회의 질은 특별히 공동체성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정도와 방식으로 표출

3) 사상적 측면에서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대립쌍을 이루었고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신고전파 경제학까지 과녁으로 삼는다. 공동체주의는 정치적 사상과 실천에 머물지 않고서, 경제학적인 영역으로까지 적용의 폭을 넓힌 지적·사회적 운동이다.

되는가와 관련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공동체(주의)적 사회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양식인 사회적 응집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현대사회의 공동체성과 사회적 응집

1980년대 미국에서 촉발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간의 논쟁은 현대의 사회성, 그 중에서도 공동체성에 내재된 실천적·규범적 속성에 대한 양진영의 자아비판이나 다름없다(박영도, 2000).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주의는 다양한 입장들의 공존과 상호신뢰가 형성된 영역으로서의 공동체를 부각시킨다.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사회성원의 존엄성 인정, 상호간의 관용, 갈등의 평화로운 중재, 결과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능동적 시민사회’의 구축이 현실적 목표로 떠올랐다(임운택, 2004). 공동체 자체를 맹목적으로 추구할 경우 집합적 결속만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별 성원들의 자유나 권리가 간과될 것이라는 자유주의의 비판은 정당해진다.

따라서 능동적 시민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다원주의가 우선시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의식, 태도, 역량이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사회성원들이 공동체적 목표를 위해 강제가 아닌, 공유된 가치나 규범을 통해 중재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들이 더욱 중요해진다.

자율적이고도 상이한 성향의 개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피하게 만들고, 다원적인 여건들·이해관계·정체성을 이해 및 용인하게끔 유도하는 사회의 역량을 ‘응집(cohesion)’이라 한다(Council of Europe, 2005). 공동체주의가 고민했던 능동적 시민사회 구현의 문제는 곧 한 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응집이 얼마만큼 발현되는가라는 과제로 전환된다.

사회적 응집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사회성원들은 목적의식적으로 공동체적 목표나 과제를 달성하고자 협력적 제휴를 맺으며 이를 통해 자유로운 공동체의 주체로서 거듭난다. 한편 사회적 응집은,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나

안녕을 목살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개인들로 하여금 능동적 시민사회를 구축하도록 이끄는 최소화된 실천양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과제나 목표가 사회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사회적 응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천은 충분한 신뢰와 정당성 없이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단위적 실체(예컨대,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들이 공동체적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에 나서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개인이 이러한 단위적 실체에 중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려해야 할 변수의 조합은 무궁무진하다. 사회적 응집은 공동체적 과제와 목표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공동탐색(co-operative enquiry)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지만, 사회적 응집에 필요한 실천이나 활동 자체는 참여 성원들의 자발적 동기나 책임감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추가로 필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관계와 그것의 권위주의적 본성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첫째, 지속적이고도 공개적인 이의제기 둘째, 민주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의사소통의 가능성이다(Berger, 1998; Council of Europe, 2005). 전자를 통해 파당적 이해관계가 불식돼야 하고, 후자를 통해서만 책임의식의 공유와 타당한 공적 규제사항들에 대한 합당한 윤리적 준거들이 제시돼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권력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집합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한 사회성원들 사이의 공동체적 복안 혹은 합의된 공공의 입장(agreed public stance)이 집약된다(Tam, 1999). 이 과정에서 공개적이면서도 견제능력을 갖춘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공공선과 공적 가치의 현실적 근거들이 훨씬 더 명료해지고 풍부해진다. 이러한 검증과 감시는 상당한 수준의 인내와 관용을 필요로 하며, 최종적인 공적, 공동체적 결정은 응집의 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선과 공적 가치들을 훼손시키지 않고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각 사회에 잠재돼 있는 공동체(주의)적 사회성은 결국 이를 위한 현실적이고도 공민적인 실천 역량으로서의 사회적 응집을 통해 확인된다. 현대

사회의 공동체(주의)성은 사회적 응집을 통한 공동체적 실천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 확대 재생산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질이 개선되는데 이바지한다.

Ⅲ. 사회적 응집의 준거와 사회의 질

그렇다면 각 사회에 내재된 응집의 역량이나 정도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또한 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성원들의 여러 가지 시도는 어떤 점에서 사회적 응집이 발현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응집은 어떻게 한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가?

사회적 응집을 위해서는 행위자 각각이 서로간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체 사회 혹은 특정한 공동체에 대해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선행돼야 한다. 특수한 관계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졌을 때, 행위자들 사이의 차이는 줄어들고 서로를 공동의 성원으로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Tyler et al., 1997).

따라서 공동체에 적합·타당한 가치와 규범에 대해 행위자들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나 과정에 대한 공동의 학습이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위자들은 응집이 유발된 사회적 사안과 관련하여, 행동의 유사성 또는 공동의 행위 지향성을 드러낸다.⁴⁾

공통된 행위양식으로서 사회적 응집이 발현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신뢰와 호혜성(reciprocity)에 의거한 활력있는 상호작용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Helly, 2003). 응집을 내포한 상호작용은 사회활동의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웃의 쓰레기 줍기로부터 공익을 위한 납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강압(coercion)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성원들 사이에서 일정 수준의 관용을 바탕

4) 사회적 응집은 이렇듯 공동의 행동을 유발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돼야 한다. 반면, 특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정서적, 감성적 결과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Mizruchi, 1990).

으로 협력적 의지가 모아져야만 사회적 응집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응집은 사회성원들이 똑같은(same) 혹은 동일한(homogeneous) 가치와 의견을 갖는 것과 거리가 있으며, 사상·신념·생활 스타일의 합일(conformity)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Stanley, 2003). 사회적 응집은 신뢰·호혜성·관용을 바탕으로 행위자들의 다양성 속에서 자발적이고도 조화로운 결집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응집은 사회질서를 순순히 따르는 것이나, 특정 사회의 내외부로부터 생겨나는 강제력·공포감·경쟁심·중오심에서 유발된 병리적 집단행위와도 엄연히 다르다. 사회적 응집은 공동체적 책무에 대한 개인들의 자유 선택의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조직, 군대, 스포츠 팀을 통해 드러나는 결속력은 사회적 응집과는 다르다. 하지만, 특정한 스포츠 팀에 대한 소속감을 지닌 채 응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군중들이야말로 앞서 살핀 사회적 응집 개념에 더욱 가깝다.

사회적 응집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시민사회의 성숙과 같은 일정 수준의 사회적 예비 조건이 불가결하다(Jeannotte, 2003). 사회성원들 서로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해 충분한 존경을 표할 때, 사회적 응집에 필요한 이해와 협력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렇기에 사회적 응집은 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원리와 가치가 훼손될 경우(예컨대, 대의제나 국가 관료제가 빚어내는 실책이나 만용), 이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도 맞물린다(Helly, 2003).

사회적 응집이 차후의 진일보한 사회적 협력을 낳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증식시키려는 보다 발전된 사회통합적 가치와 규범이 재생산돼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사회적 응집은 현대의 사회성과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응집과 이에 의한 협력의 최종 결과물이 보다 긍정하게 분배돼야만 한다. 정당한 몫의 분배가 이루어진 경우, 사회적 응집 속에 흐르는 공동체성은 다시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응집이 또 다른 사회적 응집의 가능성에 방해되지 않고, 여타의 편협한 공동체나

개별화된 개인에 의해 파편화될 위험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응집의 결과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동체 내에 흡수되어야 한다. 결국 사회적 응집은, 행위자·상호작용·공동체적 차원에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체성이 끝까지 관철되고 협력적 결과물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만 사회성과 사회의 질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3. 한국사회의 응집과 2008년 촛불집회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고도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와 호혜성에 입각한 상호작용을 축적시키는 가운데, 공동체적 목표나 과제에 직면한 사회성원들이 자발적인 선택의지를 갖고서 집합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회적 응집이다.

따라서 사회적 응집의 가능성과 수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행위양식, 일반적인 상호작용에 내재된 신뢰·관용·호혜성의 정도, 공동체적 과제와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참여의 정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들을 통해, 한국사회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사회적 응집에 도달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2008년의 촛불집회를 통해 어떻게 발현됐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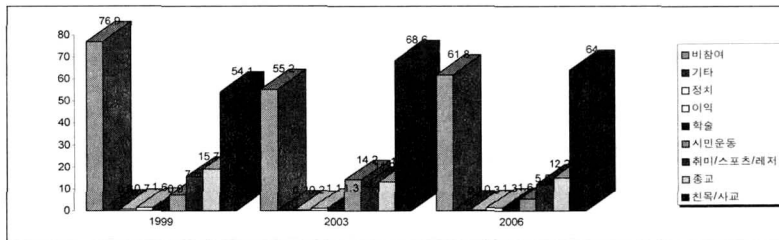
1990년대 말 이후 한국 사회성원들의 사회참여 비율이나 방식은 그다지 높지도 다양하지도 않다(〈그림 1〉 참고). 공동체적 사안을 전제로 살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만으로 사회참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주축이었던 노동·학생운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나 지지도가 약화된 것이나, 이후 각종 시민운동·이익단체의 미미한 역할 등은 이렇듯 활력을 잃은 사회참여의 원인이자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적·다원주의적 사회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비판적이거나 고도 건설적인 시민사회의 이익제기가 절대적으로 잦아들었던 것은 아니

다. 한국 사회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적 역량은 변화한 사회 여건에 맞춰 새로운 대응방식으로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하에서 점검될 것이지만,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사회운동과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른 촛불 집회에는 이러한 결과가 잘 집약돼 있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불합리한 식품수입정책과 국가권력의 실책을 시정하려는 한국인들의 사회적 응집과 공동체 지향성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게다가 2008년 촛불집회는 앞서 살핀 행위자·상호작용·공동체 수준에서 필요한 사회적 응집의 요건들을 충족시킨다.

한국의 사회성원들은 공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책임의식에서 출발하여, 공공영역 혹은 시민사회로의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사회성원들 사이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전개된 결과였다. 촛불집회와 그것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변화한 응집의 역량 그리고 질적 전환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림 1〉 한국인의 사회단체 참여방식 추이(1999~2006)

* 출처: 『한국의 사회지표』, 각 년도, 통계청

I. 한국 사회성원들의 가치·행위지향성 변화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96년에 이르기까지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을 토대로 연평균 실질 GDP 8%, 실질임금 상승률 7%를 구가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

자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 비해 수출 의존도는 더욱 커진 반면, 미국과 전 세계 경제의 침체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만한 효과적인 경제전략은 쉽사리 수립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은 고도성장에 기초한 한국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변형시켰고, 사회규범 및 문화적 토양까지도 짧은 시일 내에 뒤흔들어 놓았다. 2000년 이후 만연된 소득불평등, 고용불평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에 기초한 생활수준은 위협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분배중심적 정책 운영은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추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취업가능 인구의 취업기피 현상까지 일반화시켰다. 한편 다국적 금융기업과 금융기법이 외환위기를 빌미로 한국에 무혈입성하면서, 금융의 투기성이 전 사회적으로 과급·심화됐으며, 이와 관련된 채무를 통한 소비(debt-fueled consumption) 역시 증대됐다(Crotty & Kang-Kook Lee, 2005).

사회성원들의 경제적 안전과 자원이 일정 수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응집이 열매 맺기란 쉽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에 바탕을 둔 사회 내에서 공동체성은, 자본주의적 성격 자체를 근절시키기보다는, 경제 우선적 논리로부터 빚어지는 물욕과 물신성을 견제하고 비판하려는 시도에서 동력을 얻기 때문이다. 사회의 질 역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적 경제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확보될 수 없다(Beck et al, 2001).

그렇다면, 일상적인 경제 및 물질적 기반이 심각하게 취약화·투기화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성원들이 어떠한 가치와 행위를 우선시하는지 검토해 보면,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직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만을 살필 경우, 한국의 사회성원들은 여전히 고용안정성과 소득을 중시하는 경향을 드러낸다(<표 1>).

물질적 욕구가 생존에 직결되고 자원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회성원들은 산업화에 토대를 둔 물질주의적⁵⁾·발전주의적 가치에 몰입한

5) 여기서 물질주의는 경제적, 물리(질)적 안전을 강조하는 가치체계를 의미하며, 탈물질주의

〈표 1〉 한국 사회성원들의 직업가치

| | |
|-----------|------|
| 고용안정성 | 96.9 |
| 높은 소득 | 93.4 |
| 일의 흥미 | 92.4 |
| 사회에 대한 기여 | 85.3 |

* 단위: %(각 수치들은 출처의 결과 값을 총합한 것임)

* 출처: KGSS, 2003-2007 누적자료 중 'ISSP 2003, 2005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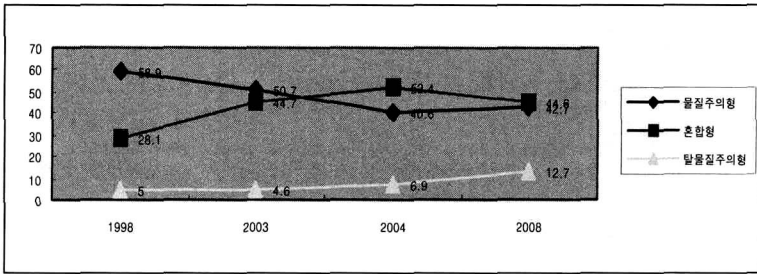
다. 그렇지만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복리를 양적으로 최대화하려 들기 보다는, 삶과 생활의 질 그리고 자아 표출적 욕구에 집중된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사회성원들이 추구하는 경우, 사회는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여길 수 있다(Inglehart, 2005).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반복적으로 심각한 경제난관에 부딪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경제적 발전만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견제하려는 탈물질주의적 태도⁶⁾는 1990년대 말 이후 한국 사회성원들 사이에 오히려 증가했다(〈그림2〉 참고). 물론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성원들이 혼합형을 추구하는 경우를 이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발전이 사회의 질을 논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다르지 않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의) 혼합형 그리고 탈물질주의형을 지향하는 사회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04, 2008년의 결과를 놓고 보면, 혼합형과 탈물질주의형 각각을 지향하

는 개인의 자아표현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아지는 가치체계를 가리킨다 (Inglehart, 1997).

6) 분석에 쓰인 자료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1998년 '현대 한국인의 의식과 관행조사', 2003년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에 대한 조사', 2004년 '광복60주년 국민 의식 조사', 2008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이다. 〈그림2〉의 백분율은 장기적 국가목표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높은 경제성장, 물가/인플레이션 억제, 경제안정'은 물질주의로, '직장과 사회에서 발언권 증대, 환경개선, 돈보다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사회'를 탈물질주의로 구분하여 산출했다.



〈그림 2〉 사회발전의 우선적 가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추이(1998~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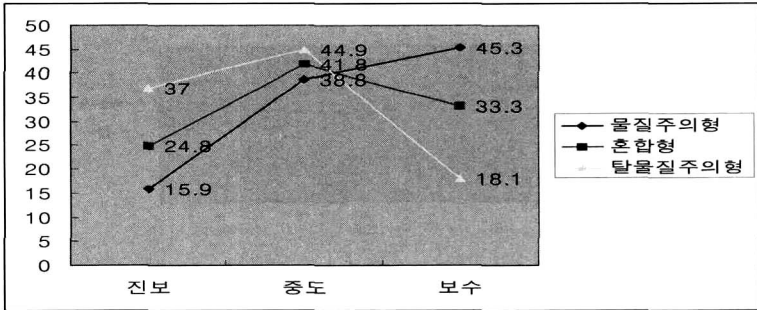
* 출처: 각년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

는 사회성원들이 상보적 관계에 있다. 이것을 통해 혼합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주의의 보다는 탈물질주의의 친화적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정치적 이념성향에 연계시킨 분석결과(〈그림3〉)를 통해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확인된다.⁷⁾ 진보 및 중도성향의 사회성원들은 대체로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보수성향의 사회성원들은 물질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림3〉에서 물질주의형을 제외하면, 탈물질주의나 혼합형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성원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중도적인 (각각 44.9%, 41.8%) 이념성향이 우세하다.

절대적 수준에서 탈물질주의자가 압도적으로 늘고 중도적 이념성향의 사회성원들이 탈물질주의를 크게 선호해야만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성원들의 가치나 행위지향성이 탈물질주의나 이념적 다양성을 용인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실로부터, 한국사회의 질적인 전환이 현실화됐음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작용의 수준에서 한국 사회성원들이 신뢰·호혜성·관용에 입각한 공동체적 의지의 가능성을 드러내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7) 〈그림3〉은 각주6)에 쓰인 (탈)물질주의에 대한 태도 항목을 응답자의 이념적 지향(매우 보수적~매우 진보적까지 5점 척도로 측정)과 함께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3〉 이념성향별 물질주의·탈물질주의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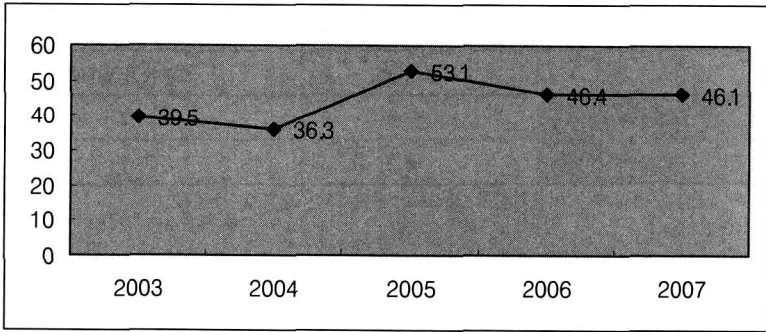
* 출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2008),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II. 응집을 위한 한국 사회의 잠재적 역량

사회적 응집은 사회성원들이 파트너십을 쉽사리 취할 수 있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 파트너십의 기회를 자유로이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며, 파트너십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성과물도 공평하게 나누려는 의지와 관련된다(Stanley, 2003). 느슨하고 유기적이지만 언제든지 형식을 달리할 수 있는 사회적 응집이야말로,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적 여건 속에서 공동체적 사회성을 이끌어갈 유일한 원천이다.

그러나 사회성원들이 특정한 편견, 이해관계, 욕구에 사로잡힐 경우 응집의 가능성은 약화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간의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파트너십 관계는, 일정한 수준의 신뢰와 호혜성 그리고 관용을 필요로 한다.⁸⁾ 특별히 전체 사회성원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수준은, 상이한 가치와 규범들이 중재될 필요가 있는 다원화된 사회가 얼마나 응집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8) 각주 3)에서 소개한 사회적 응집 지표 중 특별히 일반적 신뢰, 관용(외국인/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등은 대인적 수준에서 응집의 기회를 파악하는 핵심적 준거이다. 이를 반영하여 여기서는 일반적 신뢰,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이민자/외국인노동자/타인종에 대한 관용도를 통해 한국사회의 잠재적 응집 수준을 살폈다.



〈그림 4〉 한국사회의 일반적 신뢰수준

*출처: 각 연도별 KGSS 결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성원들이 느끼는 일반적 신뢰수준은, 일본을 포함해 서구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⁹⁾ 그런데 〈그림4〉의 KGSS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났고 이를 기점으로 일반적 신뢰수준이 40%대 중반으로 접어들어 어느 정도는 안정된 국면을 보여준다.¹⁰⁾ 사회 전반의 호혜성을 알아볼 수 있는 사회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¹¹⁾, 2004년에 비해 2006년에 다소간 상승한 결과도 나타난다(〈표2〉).

9) 각 국가별 일반적 신뢰수준을 알 수 있는 〈World Values Survey〉에 의하면, 1999년의 경우 스웨덴 63.7%, 미국 35.5%, 독일 31.2%, 영국 28.5%, 2000년 일본의 경우 39.6%, 2001년 한국은 27.3%로 나타났다(<http://www.jdsurvey.net>). 측정된 시기에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스웨덴과 영국을 제외하면, 한국의 신뢰수준은 일본, 미국, 독일에 비해 조금 뒤쳐져 있다.

10) KGSS에는 '사회에 대한 일반적 신뢰'와 '일반인들에 대한 신뢰'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분석결과의 해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후자를(항상 신뢰할 수 있다-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4점 척도로 측정)를 택하였고 신뢰와 불신의 양대 입장으로 재코딩하여 결과를 산출했다.

11) KGSS 조사항목 중 타인이 응답자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통해 측정됐다.

〈표 2〉 한국사회의 공정성^{*)}

| | 공정하다 | 공정하지 않다 |
|-------|------|---------|
| 2004년 | 59.6 | 37.2 |
| 2006년 | 63.3 | 18.1 |

*#): 타인이 응답자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로 측정됨

* 단위: %

* 출처: 각 연도별 KGSS 결과

2000년대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경향도 심화되는 시점인데 그런 점에서, 이주자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전체 사회의 다원성과 관용도를 가늠해 볼 중요한 준거이다. 〈표3〉의 〈World Values Survey〉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관용도는 1996년 61.5%로 급격히 높아졌다가 2001년 53.2%로 약화됐다. 그렇다 해도 이것은 1990년의 46.6%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타인종 사람에 대한 관용도를 보면, 1990년 42.1% 정도이던 것이 2001년 65.3%로 증대됐다. 적어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주민/외국인노동자/타인종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개선되고 있다.

〈표 3〉 이민자·외국인노동자·타인종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용도

|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 받아들인다 | 받아들이지 못 한다 |
|------------------|-------|------------|
| 1990 | 46.6 | 53.4 |
| 1996 | 61.5 | 38.5 |
| 2001 | 53.2 | 46.8 |
| 타인종 사람을 이웃으로 | 받아들인다 | 받아들이지 못 한다 |
| 1990 | 42.1 | 57.9 |
| 2001 | 65.3 | 34.7 |

* 단위: %

* 출처: 각 연도별 〈World Values Survey〉 결과

전반적 신뢰, 호혜성, 관용도 수준의 점진적 향상은 한국사회가 파트너십에 입각한 응집을 위한 능동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높여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림1>에서 보았듯, 사회활동에 참여적이기보다는 비참여적인 구성원들이 더 많고, 그 방식도 친목이나 사교를 위한 활동에 편중돼 있다. 파트너십에 의거한 응집의 가능성이 증대되었음에도 한국사회 성원들이 사회 변화나 개선을 위한 활동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다소간 역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다원화된 한국사회가 내적인 저항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간의 대립되는 입장과 의견을 집합적 차원에서 절충 및 조절해가는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대립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긴장을 상실하지 않은 채 다원주의를 유지하고, 공동체적·대승적 차원에서 최종적인 합일점을 찾아가는 ‘논쟁적(agonistic)’ 민주주의¹²⁾의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이다.

이와 병행적으로 축적된 한국사회의 보다 발전된 응집력은 제도화된 정치권력과 시민운동 영역의 안일함을 깨뜨리는 전혀 새롭고도 자생적인 사회적 견제 및 대항양식으로 표출됐다.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결실을 사회 모든 영역의 권력과 권위체계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평화적인 도전을 통해 이어가려는, 보다 진화된 방식의 사회적 저항이 ‘촛불집회’의 형식으로 등장했다.¹³⁾

12) 민주주의는 본래적으로 다원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사회적 대립(antagonism)을 내포한다. 다양한 종교·윤리·규범 등이 상충하는 가운데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합일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다원주의적 현실 속에는 존재한다. ‘논쟁적 민주주의’ 혹은 ‘급진적 다원민주주의(radical plural democracy)’는, 끊임없는 갈등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개인주의적 합리성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갈등과 대립을 인정하면서도 공평무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원주의를 말한다(Torfig, 1999; Laclau & Mouffe, 1985).

13) 한국사회에서 촛불집회는 2000년 시민단체 주도로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촉발됐다.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2명의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는 본격적인 사회정치적 이의제기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주한미군에 대한 사법처리 제도 개정, 한국군 해외파병 반대운동으로 연이어지면서, 촛불집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그간 쌓아온 민주적, 다원주의적 역량을 집약적으로 표출하는 통로가 됐다.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지닌 일반적 한국 사회성원들이 현실적으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그간 촛불집회의 주된 참여자였다(장우영, 2006). 집회의 진행과정에서 이들은 기본적인 취지나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어떤 식으로도 동일한 신념이나 사상을 수용할 것을 요구받지 않았다.

그런 만큼 촛불집회는 한국의 사회성원들이 타인의 권리, 사상, 신념에 대해 충분한 인내와 관용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결국 촛불집회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한국 사회성원들 사이에 잠재됐던 응집성이 새롭게 발현된 결과이자, 민주화 이후 축적된 다원주의적 발전의 성과이기도 하다.

III. 2008년 촛불집회: 사회적 응집의 현재적 수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2008년 5월 2일부터 시작되어 8월까지 100회 넘게 이어졌다. 짧은 시간 빚어진 이명박정부의 실정(교육·부동산 정책 및 인사문제)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의 일방성이 그간 잠재됐던 한국사회의 응집력을 폭발시켰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 사회성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4개월간 지속시킨 이유와 응집의 동력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건강·생명과 같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외면한 채, 강박적인 경제발전 논리를 우선시한 정부 혹은 국가권력의 작성과 반성을 요구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었다. 또한 일상적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책임감 있고 자주적인 정책의 집행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려는 의지가 폭발한 것이었다.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체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식품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클 수밖에 없고, 한국인들도 그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¹⁴⁾ 그래서 개개인의 그리고 국

14) 이 논문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를 통해 실시됐다. '2008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스스로의 혹은 전체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은 '매우 높다'~'매우 낮다'의 5점 척도로, 음식에 대한 염려나 불안감은 총 6개 문항(유전자 변형식품, 식품첨가제(색소·방부제·향료), 고기류의 잔류 항생제·호르몬, 과일/채소류의 잔류 농약성분, 조류독감 등의 신종 바이러스, 비위생적 음식물 관리)에 대해 '매우걱정'~'전혀 걱정않음'의

민 전체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는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구매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¹⁵⁾ 이는 2008년의 촛불집회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편향에서 생겨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식품에 대한 한국사회 성원들의 일상적 염려와 걱정에서 우러난 필연적 결과임을 의미한다.

〈표 4〉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감¹⁶⁾

| 독립변수 | β | S.E. | Wald | df | Sig. | Exp(β) |
|-----------|---------|------|--------|----|------|----------------|
| 재해/사건 불안감 | -.045 | .115 | .154 | 1 | .695 | .956 |
| 식품불안감 | .144 | .027 | 29.222 | 1 | .000 | 1.155 |
| 질병불안감 | .003 | .018 | .025 | 1 | .874 | 1.003 |
| 상수 | -1.189 | .564 | 4.449 | 1 | .035 | .305 |

* 자료 출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2008),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게다가, 〈표 4〉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한국 사회성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생겨날지도 모를 광우병 위험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재

4점 척도로 측정했다. ANOVA 분석을 위해 안전의식 수준은 고, 중, 저의 3점 척도로 재코딩했고, 음식물 불안감은 6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합산하여 산출했다.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별(고·중·저) 식품 불안감의 평균값은 각각 14.096, 14.887, 15.530이며 이중에서 안전의식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안전의식이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은 식품에 대한 불안감도 덜하다. 전체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별(고·중·저) 식품 불안감의 평균값은 각각 14.520, 14.841, 13.991이며 여기서는 전체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집단과 중간정도라고 평가한 집단 사이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전자에 속하는 집단의 식품 불안감이 좀 더 높다.

- 15) '2008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 및 전체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구입여부에 대한 태도와 각각 교차분석한 결과에 의하면($\chi^2=1.845(p).05$, $\chi^2=1.589(p).05$), 안전의식 수준별 구입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 16) 로짓 회귀분석에 쓰인 독립변수는 '재해/사건'불안감 관련 문항 5개, '식품'불안감 관련 문항 6개, '질병'불안감 관련 문항 5개를 각각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한 값을 사용했고, 종속변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의식'을 2점 척도(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로 측정하여 사용했다.

해·사고 혹은 질병의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합당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음식품(및 이것의 유통) 문제로 여겼다. 그런 만큼 촛불집회를 처음부터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반정부 시위로 단정짓은 정부와 여권의 미숙한 판단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정권퇴진이나 반정부 구호가 본격화된 것은 수입고시를 강행한 5월 29일부터였기 때문이다.

〈표 5〉 추가협상에 대한 태도와 미국산 쇠고기의 구매 여부¹⁷⁾

| 독립변수 | β | S.E. | Wald | df | Sig. | Exp(β) |
|-------------|---------|------|--------|----|------|----------------|
| 추가협상에 대한 태도 | .220 | .025 | 80.356 | 1 | .000 | 1.246 |
| 상수 | -3.011 | .402 | 56.125 | 1 | .000 | .049 |

* 자료 출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2008),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6월의 촛불집회를 통해 터져 나온 요구들에 부응하여 정부는 미국과 2차 추가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추가협상 자체나 그 결과에 대해 한국 사회성원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순순히 응하지도 않았다. 〈표 5〉에서 나타나듯 추가협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협상 내용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수입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강해진다. 또한 〈표 6〉에서와 같이 추가협상 자체와 협상 내용에 대한 긍·부정적 태도는 촛불집회에 대한 참여여부를 판가름하고 있으며, 추가협상에 부정적일수록 촛불집회에 대한 참여가 높았다.

따라서 더욱 안심할만한 대책과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17) 로짓 회귀분석을 위해 '추가협상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무역보복이 있더라도 재협상해야 한다'라는 항목과, 추가협상의 구체적 내용인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광우병 위험물질(SRM) 수입금지', '30개월 연령금증 품질평가 프로그램(QSA)', '한국점검단의 미국 작업장 관리',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항목을 모두 총합한 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했다. 종속변수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 값이 사용됐다. 후자의 경우 분석을 위해 구입, 비구입의 이진변수로 재코딩했다.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역동적이고도 능동적인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형성하는 논쟁적 민주주의의 정치를 정부는 계속해서 거부했다. 반면 한국의 사회성원들은 촛불집회라는 사회참여를 통해 전사회적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시민적, 공동체적, 사회적 대화를 즐기치게 시도했다.¹⁸⁾

〈표 6〉 추가협상에 대한 태도와 촛불집회 참여 여부¹⁹⁾

| 독립변수 | β | S.E. | Wald | df | Sig. | Exp(β) |
|-------------|---------|------|--------|----|------|----------------|
| 추가협상에 대한 태도 | -.087 | .038 | 5.161 | 1 | .023 | .916 |
| 상수 | 4.200 | .699 | 36.047 | 1 | .000 | 66.664 |

* 자료 출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2008),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집회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은 사회성원들의 자발적 성금이나 구매를 통해 마련됐고, 광우병과 기타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식이 교류될 수 있는 기회 역시 집회와 인터넷을 통해 쉽사리 제공됐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노골적으로 비판될 정도로 촛불집회를 통해 생산되고 공유된 정치적 담론들에는, 공동의 사안에 대해 질적으로 한 차원 성숙한 공동체적 해결책을 갈망하는 사회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시 말해, 2008년 여름 한국의 촛불집회는 공동체성에 입각한 사회적 응집(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수입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근본적 결함까지 사회성원들이 공민적으로 숙고하게 만든 심의(deliberative)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²⁰⁾

18) 이러한 시도가 무엇보다도 정부에 의해 거부됐다는 점은 '정부와 국민'(77.2%), '정부와 시민단체'(71.8%), '정부와 언론'(63.7%)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61.8) 사이에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2008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다.

19) 로짓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는 앞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것이 사용됐고, 종속변수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하여 촛불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이 사용됐다.

이로써 한국의 사회성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 넘어, 정책적 판단과 집행에 필요한 규범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즉 충분한 지지·동의·신뢰를 거쳐 정책이 집행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밑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이의제기와 저항을 통해 사회성원들의 공동체적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타당함을 웅변한다(〈표7〉).

〈표 7〉 정부(역량)에 대한 신뢰와 촛불집회에 대한 정당성 평가²¹⁾

| 독립변수 | β | S.E. | Wald | df | Sig. | Exp(β) |
|---------------|---------|------|--------|----|------|----------------|
| 정부(역량)에 대한 신뢰 | -.206 | .040 | 27.202 | 1 | .000 | .814 |
| 상수 | 1.543 | .408 | 14.320 | 1 | .000 | 4.679 |

* 자료 출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2008),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제도화된 정치적·사회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수준에 대한 실망은, 보수세력뿐만 아니라 진보세력 혹은 시민단체에 대한 한국 사회성원들의 외면으로까지 이어졌다(이종구, 2008). 유기적으로 고도화된 한국사회의 응집 역량은 위로부터 제도화된 정치·사회적 실체보다는 아래로부터 형성된 사회성원 공동의 일상 속에 축적됐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법적·제도적 질서를 순순히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특정집단이나 단체가 한국사회 안팎에서 조성한 불안감이나 선전·선

20) 대의제 민주주의와 그 대리인들은 사회성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와 공공선의 구현을 위한 의사소통을 사회성원들 사이에서 보다 충실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심'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심의성의 문제와 관련해 대의제 민주주의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의 다원성에서 비롯된다(김주성, 2008). 따라서 다원주의에 입각한 참여가 충분히 확보될 경우에만 심의적 민주주의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할 수 있다.

21) 로짓 회귀분석을 위해 '2008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정부의 안전관련 정책역량에 대한 평가·식품안전 관련 법집행의 적절성 평가 문항들에 대한 값을 총합하여 독립변수로 처리했다.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우려한 정당한 문제제기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가 종속변수로 사용됐다. 조사결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나 정책집행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록 촛불집회를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에 의해 지속되지도 않았다. 촛불집회로 마련된 열린 공간 속에서 쇠고기 수입정책을 견제하지 못한 사회성원 공동의 책임감도 지적됐다. 쇠고기 협상뿐 아니라 수입 이후 정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성원 모두의 대응방안까지 논의됐다.

정리하자면,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의 결핍된 민주성에 대해 한국의 폭발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사회적 응집의 역량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사회운동이었다. 또한 공동체적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지와 노력이 사회의 응집 역량과 어우러지면서, 민주주의적 정치의 내용과 질을 문제 삼은 공민적 저항이었다. 결국 2008년의 촛불집회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와 열망으로 사회의 질적 발전과 향상을 꾀한, 자생적이면서도 공동체주의적인 사회성의 실질적인 결과물이다.

4. 맺음말

공동체성이 구현되기 위해서 사회적 응집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적으로 응집된 상대가 반드시 공동체성에 입각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를 핵으로 하나의 사회가 응집돼 있다는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높은 질적 발전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가 공동체주의의 편익을 독점하려는 응졸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주의를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공동체성의 구현 단위는 가족·계급·기업·촌락·지역·민족·인류순으로 상위로 올라간다(주중환, 2006). 대륙적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사회의 질에 대한 유럽식 문제제기를 따르더라도, 아직까지 국가 단위 이상에서 공동체성을 논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사회적 응집이 공동체성을 계기로 한 국가 내에서 목격된다면, 사회의 질에 대한 담론과 직결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사회의 질을 걱정하고 공동체적 이익을 보다 폭넓게 구현하려는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의지와 실천 그리고 잠재력을 돋보이게 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의 사회성원 모두를 위협에 빠뜨릴지도 모를 공동체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역량이 한층 더 적극적으로 분출될 수 있음을 알린 신호탄이기도 하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기조나 단절된 의사소통 방식을 크게 뒤바꾸지 못했고, 참여한 시민들의 의지가 가시적인 성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촛불집회가 어느 정도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응집을 통해 추구된 목표가 정책이나 정치적 과정에 반영돼야만 올바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아무리 발전된 민주주의의 외피를 두른 정체(polity)라 해도, 대다수 사회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한계는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공동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응집이 발휘된 이후, 더 많은 협력과 한층 향상된 응집의 가능성이 사회 내에 축적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안녕(well-being)의 파손가능한(fragile) 상황과도 언제나 관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응집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Jeannotte, 2003). 그럴 경우 사회적 응집은, 사회의 질은 물론 공동체성, 다원주의, 민주주의 모두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가시적인 결과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2008년의 촛불집회는, 암묵적이면서도 더 큰 파괴력을 지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다. 첫째로 한국의 사회성원들이 경제성장 우선적 가치나 물질주의적 발전관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과 서로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우선시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입증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제가 됐던 개인주의적 자율성과 정체성은 오히려 한국사회의 권위주의가 작동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 제동을 걸었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기계적이며 박제화된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일조했다.²²⁾ 현대사회의 공동체(주의)성에 의해 견인된다

면, 개인주의는 언제나 대자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주의)를 강화시키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동력이 된다.

둘째로, 촛불집회는 다원주의 사회를 응집 및 발전시킬 힘이 원활한 시민적, 공동체적, 사회적 의사소통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과 동떨어져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아래로부터 형성된 응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절차적·과정적 민주주의는 퇴보될 수밖에 없다.

대외적 민주주의의 대리인들은 삶의 질에 대한 한국 사회성원들의 관심이 고양돼 있음을 인정하고, 수량화된 물질적 성취에 급급해하지 않으며, 사회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전환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급기야 권력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고 더욱 강력한 응집과 저항이 초래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사회의 응집 역량은 구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소모적으로 소진되고 말 것이다.

셋째로 2008년의 촛불집회는 한국 사회성원들의 자발적이고도 자생적인 의지와 열망이 구태의연한 시민사회 혹은 사회운동 진영의 자기모순성을 딛고 넘어선 최초의 사건이다. 변변한 지도부 없이 4개월 가까이 자발성과 자기조직화 능력에 의해 유지된 촛불집회는, 기존의 시민·사회운동 단체에게 많은 각성의 시간을 요구했다.

질적인 사회발전 패러다임을 갖추고, 공동체적 과업 앞에 개인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는 한국의 사회성원들에게, 기존의 시민·사회운동 세력은 이제 성숙한 대안적 사회운동의 방식을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 사회의 질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적 응집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사회의 저변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나 다원주의의 또 다른 차원을

22) '촛불소녀, 평화예비군, 닭장차 투어, 유모차 부대'처럼 2008년 촛불집회를 수놓은 현실적 표상들은 모두 자발적이고 개별화된 제안과 의견에서 출발했다. '반미·반정부천민민주주의'로 촛불집회를 매도하려 했던 논의들은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 다른 한편으로는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동원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반감만 키웠다.

일궈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주성(2008),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보』, 42(4), pp.5-32.
- 김동수(1994),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28(1), pp.275-296.
- 주종환(2006), 「공동체의 경제학(II): 공동체사회와 시장경제사회의 발생사적·이론적 고찰」, 『사회경제평론』, 27, pp.263-291.
- 이종구(2008), 「퇴행의 정치와 참가민주주의」, 『실천문학』, 92, pp.321-332.
- 임운택(2004), 「제3의 길과 공동체주의」, 『사회와 이론』, 5, pp.217-236.
- 장우영(2006),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 ‘총선연대’와 ‘노사모’의 사이버 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3(3), pp.49-68.
- Amable, B.(2000),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diversity of social systems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7(4), pp.645-687.
- Amable, B.(2003),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Beck, W. et al.(2001),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rger, P.(1998), *The Limits of Social Cohesion: Conflict and Mediation in Pluralist Societies*,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 Berting, J. & Villain-Gandossi, C.(2001), “Urban Transformations, The French Debate and Social Quality” in Beck, W. et al.(2001)
- Council of Europe(2002), *New social demands: the challenges of governanc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uncil of Europe(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Belgium,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rotty, J. & Kang-Kook Lee.(2005),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in Post-crisis Korea" in Epstein, G. A.(eds),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Etzioni, A.(1998), *The essential communitarian read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Hall, P. A. & Soskice, D.(2001), *Varieties of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Helly, D.(2003), "Social Cohesion and Cultural Plurality",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8(1), pp.19-42.
- Inglehart, R.(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 Welzel, C.(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annotte, S.(2003), *Social cohesion: insights from Canadian Research,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Social Cohesion*, Hong Kong, November 29, 2003.
- Jensen, J.(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CPRN Study.
- Laclau, E. & Mouffe, C.(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London, Verso.
- Mizruchi, M. S.(1990), "Cohesion, Structural Equivalence, And Similarity of Behavior: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orporate Political Power", *Sociological Theory*, 8(1), pp.16-32.
- Nisbet, R.(1969), *Quest for Commu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m, H.(1998), *Communitarianism*, New York University Press.

Tyler, T. R. et al.(1997), *Social Justice in a Diverse Society*, Westview Press.

Torring, J.(1999), *New Theories of Discourse: Laclau, Mouffe and Zizek*, Blackwell Publishers.

Social cohesion and social quality in Korea: the case of 2008 candlelight vigils

Koh, Hyung-M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ries to clarify that the emerging discourses of social quality in European N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new development paradigm based on communitarianism in modern societies. Communitarian properties of the social in the concept of social quality support pluralism and democratism of modern capitalist societies. Besides, pluralism, democratism and communitarianism can only be linked by organic cohesion which is generated by the community-oriented social interaction and dialogue in those societies. In 2008, a series of candlelight vigils were held to protest against US beef import policy for almost four months in Korea. Obsessed with materialist values and quantitative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 is not aware of Korean people's cohesive will and practice over the social quality and agonistic democracy, which has been accumulated in Korea after the late 1990s economic crisis. The protests are the exemplars of organic cohesion in a plural and democratic society.

Key words

social quality, the social, communitarianism, cohesion, candlelight protest, agonistic-radical plural democracy